

세종시 싸고 친이-친박 '폭풍전야'

잡잡하던 한나라당 계파 갈등이 세종시 문제로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친박(친 박근혜)계가 박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 추진' 발언 이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해 친이(친 이명박)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이계는 일단 10·28 재보선이 일박한 만큼 일단 선거에 집중한 뒤 선거가 끝난 뒤 반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세종시 문제는 '총리 대안제시-여론수렴-정부 입장 최종 확정'이라는 기존 방침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친박계는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박 전 대표의 "당의 존립에 관한 문제", "필요하면 원안에도 플러스 알파를 해야" 등의 강경 발언 이전까지만 해도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상당수 친박계 의원들이 수정론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발언 이후 그의 의견이 자취를 감추고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만 들리고 있다. 친박계의 유정복 의원은 이날 "세종시는 대통령 선거시 명확하게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현 의원도 "세종시 수정안으로 앞으로 심각한 신뢰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박 전 대표는 강력한 발언 이후 상황을 관망하면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친이계는 "지금 세종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며 "당으로서 정부가 대안을 낼 때까지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 의견 충돌이 있는데도 친이계는 일단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폭전에 있는 재보선 때문이다. 적 전분열을 우려한 것이다.

그렇다고 세종시 수정에 대한 기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정몽준 대표가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0주기 추도식에서 분위기를 마친 뒤 함께 식사를 나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세종시 원안+알파' 발언 뒤 관망모드

친이, "박심은 뭐냐" ...재보선 뒤 반격 니설 듯

방점을 바꾼 것은 아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론화하고 총리실이 대안을 마련, 연내에 결론내겠다는 것이 여권 핵심부와 친이계의 생각이다.

한 핵심당직자는 이날 "지금 세종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며 "당으로서 정부가 대안을 낼 때까지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총리실에서 대안을 만들다니,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총리실의 방침만 기다리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갈등을 우려, 박 전 대

표의 발언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늘 해오던 원론적 언급"이라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의 언급은 한나라당의 당론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0·28 재보선 이후 친이-친박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친이계가 수정안에, 지방을 중심으로 한 친박계의 의견 절충이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문열씨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세종시 논란에 대해 "포퓰리즘적 발상에서 정책 결정도 됐고 그때 포퓰리즘에 편승하기 위해 동의해줘 버린 것"이라고 규정하며,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변형된 포퓰리즘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중근과 김대중 '동북아 평화구상' 유사"

최경환 前 비서관 학술토론회서 주장

최경환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객원교수는 26일 "안중근 장군의 '동양평화론'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경제적 공동체의 기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유사하다"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낸 최 교수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00주년을 맞아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주최로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학술토론회의 발표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안 장군은 동양평화론에서 한·중·일 3국이 공동운명을 설립하고 공동화폐를 도입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만들 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동아시아도 경제공동체를 시작으로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는 김 전 대통령의 구상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동양평화론은 '6자회담을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항목이 포함된 2005년 '9·19공동성명'에도 맥이 닿아 있으며 앞으로 논의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방학 중 굶는 학생 없다"

광주시, 민노당 광정숙 의원 주장 반박

광주시는 26일 "방학 중에도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본보 26일자 '광주·전남 결식아동 3만6천여명 방학·휴일엔 굶는다' 제하 기사와 관련, 민주노동당 광정숙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오류가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이와 관련 광 의원은 자신이 배포한 '기초단체 방학 중 급식지원

현황' 자료에 데이터 분석 오류 때문에 이같은 차이가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광 의원은 광주지역 방학 중 급식률이 지난해 8월말 기준 동구 13% (2천648명 중 345명), 서구 33% (4천464명 중 1천463명), 남구 18% (6천78명 중 1천85명), 북구 28% (9천210명 중 2천586명), 광산구 26% (6천512명 중 1천716명)로 집계됐다고 정

정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광 의원의 자료는 지자체 지원 예산만 분석한 것으로 국비 지원 예산까지 합하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실제 방학·휴일에 굶는 학생은 없다"며 "지난해 광주지역 방학 중 급식 인원은 1만9천750명(동구 1천825명, 서구 3천992명, 남구 2천207명, 북구 6천619명, 광산구 5천107명)이었고, 올해는 2만6천515명(동구 1천827명, 서구 4천935명, 남구 3천914명, 북구 8천783명, 광산구 7천56명)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정치학 관련 전문가들 촉구

김영래 아주대 교수 등 지방자치 및 행정학 분야 학자 96명은 26일 기초지방단체장·의회 선거에서 정당공

천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정당공천제는 지방 정치인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게 하고 지방 '일당독재'를 부추긴다"며 "내년 기초지방

선거부터 이 제도를 없애는 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공천제는 '공천→당선' 공식을 만들어 선거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공천현금을 둘러싼 비리를 유발한다. 출마자가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충성서약을 바쳐야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시민 중심' 광주 녹색성장포럼 28일 출범

광주시의 녹색성장 정책을 개발하고 에너지 절감 등 시민운동을 주도할 광주 녹색성장포럼(가칭·창립 준비위원장 고재일)이 28일 발족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경제와 교육, 법조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의 회의로 지난 8월 구성된 녹색성장포럼이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정관 제정과 임원 선임에 이어 심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녹색성장포럼은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열어 녹색성장 정책을 개발해 시에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유도하는 시민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세종시 원안 고수" 박근혜 前 대표 응원?

민주 '박 前대통령 서거 30주기' 이례적 논평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0주기를 맞아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공식 논평을 내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10·

26에 대해서 정당은 논평을 낸 적이 거의 없지만 3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겠다"면서 논평을 읽어내려갔다.

그는 "오래된 역사에 대해서 대개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 행복했던 기억을 추억하려 하고,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던 사람은 같은 사건이어도 가슴 아팠던 기억을 더 부각시키려 하는 현상이 있다"

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러한 점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박정희 시대의 공과와 그의 평가를 놓고 우리사회가 나누어져 있다는 주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

한 긍정적 시각도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포함, 민주당이 10·26 사태에 대해 논평을 낸 것은 매우 드문 일. 10년 전인 1999년 20주기 때도 김대중 정부 청와대는 자민련과 연정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논평을 거부했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올해 논평을 낸 것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거 30주기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데다 '세종시' 원안 고수 발언을 한 박근혜 전 대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기/냄새로 민원고충 YHB가 해결

YHB

마시자! 알칼리 이온 시스템

특정 가격/세/일 625,000 원

광주지사 1544-1219

[구]동양과학 [주]이오니아